에너지 무역규제 장벽 강화

미국, 저효율제품 수입금지 … EU는 환경표시제 도입

환경보호 조류가 세계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들이 점차적으로 에너지관련 무역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대응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미국·EU등 세계 주요각국들은 공산제품등의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이 환경문제 해결과 자국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최적수단으로 인식하고 범국가 차원에서 법제도정비 및 기술개발 등 관련시책을 대거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선진국의 정책동향 개요

구 분	관련법및국가계획	내 용
미 국	에너지정책법 (1992.10) 「Climate change Action Plan(1993.10)	수요관리(DSM)프로그램의 활성화 에너지소비효율기준의강화적용 Green-Light Program의 추진 기술개발의 촉진지원
일 본	에너지사용합리화법 (1993)개정 에너지절약 리사이클지원법 (1993.6)제정 「지구온난화방지행동계획」	규모별·분야별 종합 대책추진 기술개발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에너지소비효율기준의확대적용 실시 에너지다소비기업 절약계획서제출의무화 절약투자에 대한 금융및 세제지원 강화
E C	EC위원회 「포괄적 EC전략」	에너지·탄소세의 도입으로 효율개선유도 (덴마크등 5개국이미 도입 실시중)
캐나다	에너지효율법 (1992) 「Green Plan」	SAVE계획에 의거에너지이용효율 개선 (ECO-LABELLING제 도입의결 등) 에너지사용기기의 효율기준 책정 강화 에너지사용기기의 라벨링제도강화 에너지사용에 관한 국가D/B 수립

미국·캐나다의 경우 에어컨·난방기·수도꼭지등의 일반 급수기기등에 대해 예시기간을 두고 저효율제품의 국내유통 및 수입을 금지할 계획이다.
EU는 올해 1월부터 Eco-Labelling(환경표시제도)을 도입, 일차적으로 내년부터 냉장고·냉동기등에 대해 연간 에너지 소비량의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화학저널 1994/4/25>